

社說

조합장선거 불·탈법 뿌리뽑아야

오는 13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최근까지 불법행위 220건을 적발해 298명을 검거했다.

올해 조합장 선거는 2015년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되는 전국 동시 선거로,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전국 1천344개 조합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광주시와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6-27일 이틀간 후보 등록 접수를 받은 결과 광주 52명, 전남은 445명(사퇴자 1명 제외) 후보가 등록해 평균 경쟁률은 광주 2.9대 1, 전남 2.4대 1이다.

세부적으로는 광주의 경우 16개 농협에서 46명(2.9대 1), 1개 수협에서 3명, 1개 산림조합에서 3명이 등록했다. 전남에서는 145개 농협에서 354명(2.4대 1), 19개 수협에서 43명(2.3대 1), 21개 산림조합에서 48명(2.3대 1)이 출사표를 던졌다.

광주축협, 하남농협 등 광주 2곳, 순천농협·나비골농협·남평농협·소안수협 등 전남 28곳에서는 1명만 등록했다. 피선거권 등에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이들 후보는 무투표 당선된다.

현재까지 잠정 선거인 수는 광주 2만7천775명, 전남 41만2천684명이다.

개별적으로 실시되던 조합장 선거를 선관위가 위탁관리해 전국이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뿌리 깊은 혼탁선거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조합장 선거는 한때 '5당4력' (5억 원

쓰면 당선, 4억 원 쓰면 낙선)으로 통했다. 그만큼 불·탈법이 만연했다는 것이다. 제1회 선거가 치러진 2015년에도 전국에서 불법행위 867건이 적발돼 171건이 고발 조치되고 56건이 수사의뢰, 582건이 경고 등을 받았다.

선관위의 강력한 단속과 홍보, 예방 활동에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조합장 선거의 뿌리 깊은 혼탁 분위기 때문이다. 조합장이 되면 지역에서 큰 권한을 가질 수 있어 과거부터 경쟁이 심했고 돈 선거로 불릴 만큼 공정성 문제가 심각했다.

후보자들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데는 '위탁선거법' 탓도 크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후보자의 정권발표나 정책토론회·연설회를 금지하는 등 입과 발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게 해 '깜깜이 선거'로도 불린다.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 2월 28-3월 12일로 한정적인 데다 사전 명함배포도 금지돼 얼굴 알리기조차 쉽지 않다.

반면 이미 인지도가 있는 현직 조합장은 유리한 측면이 있다.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법 취지와 달리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제한해 오히려 법 위반자를 양산하는 위탁선거법은 빨리 개정돼야 한다.

농어촌지역의 조합은 지역경제와 금융의 모세혈관 역할을 한다. 누가 조합장이 되느냐에 따라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혜택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만큼 인물과 자질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아이들을 불모로 뿔 쟁기겠단 말인가

◆ 금남로에서



이문수 본지사장·편집인

46.2%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492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북·부산·대구 339곳, 경남·울산 189곳, 충청·대전 178곳, 서울·강원 170곳, 전라·광주 165곳 등이다. 이들은 또 교육부가 개학연기에 동참하려는 유치원을 협박하고 있다면서 극소수 유치원만 개학연기에 참여하는 것처럼 숫자를 왜곡해서 발표하는 치졸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유총은 개학을 불과 20시간 가량 남기고 기습적으로 '개학 연기'를 발표했다. 긴 겨울방학과 3·1절 연휴가 끝나고 4일이면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학부모들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다.

한유총은 유아교육법에 개학일이 따로 명시돼 있지 않고, 연간 법정 수업 일수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개학연기'가 합법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주장대로라면 전국의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도 형편에 따라 개학을 연기하고 한여름에 수업을 하든지, 한겨울 흑학에 수업을 하든지 연간 수업일수만 맞추면 된다.

명색이 교육자를 자처하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예고 없이 '개학연기'를 선포하고 '준법투쟁'이라고 떠들어대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당장 아이 맡길 곳을 찾아 헤매야 하는 유치원 학부모들로서는 그저 분통 터질 일이다.

한유총은 한 바 더 나아가 정부가 탄압하면 '폐원투쟁'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은 "유치원의 개학일 결정은 유치원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개학연기는 준법투쟁"이라면서 "정부가 계속 압박하면 오는 6월까지 폐원 관련 회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협박성 발언을 서슴없이 내뿜었다. 제때 문을 열어 원생들을 받아들이고 잘 좀 지도해달라는 요청을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한유총은 박근혜 탄핵 불복집단과 다를 바 없다.

한유총은 특히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회계비리를 저질렀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유치원 관련 법률을 고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그냥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유치원 원장이 정부보조금과 학부모들로부터 거둬들인 원비를 앞으로 계속 임의로 처리할테니, 어디에 돈을 쓰든지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일은 간섭하지 말라는 주장을 되풀이한다.

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는 '악법'인 셈이다.

학부모들에게 개학연기는 집단휴업과 다름없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치원이 집단휴업을 하면 직접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유총이 '집단휴업'은 아닌 것처럼 둘러대면서 '집단휴업'이나 다름 없는 '개학연기'라는 카드를 합법이라 주장하며 꺼내들었다. 한마디로 법망을 피해 자신들이 원하는 파업 효과를 보겠다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한유총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유치원 3법 개정을 포기하고, '에듀파인'은 국공립 유치원에서만 사용할 경우 파업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유치원 부지와 건물 등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해 사용·수익·처분권을 보장하고, 원장이 임의로 폐업하면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한다.

교육부와 전국 사·도교육청이 조사한 결과, 상당수 사립유치원에서는 학부모들에게 고액의 원비를 받아 원장의 명품 핸드백과 외제 승용차를 사는데 지출했다. 유치원에 재직하지도 않는 원장 친인척에게 급여 명목으로 많은 돈을 지급한 것도 비밀비재하다.

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하면 이런 부조리가 받을 불일 수 없을 것이다.

유치원 원장들이 염려하는 게 바로 이것인지 묻고 싶다.

한유총은 유아들의 건전한 발달과정을 담은 '누리교육과정'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저 돈벌이에 익숙한 영어조기교육이나 사형성 교육으로 한판이라도 더 쟁기겠다는 속셈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사립유치원 측의 사유재산성 인정 등 일부 요구는 일리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런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개학연기까지 할 일인가.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인 유치원들의 집단행동은 누구의 호응도 받지 못한다. 잊을 만하면 나오는 한유총의 집단행동 위협에 아이를 불모로 잡힌 부모들은 불안하다. 한유총의 강경파 유치원 원장들이 학부모들의 간절함을 외면한다면, 결국 그들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다.

독자기고

논·밭두렁 태우기, 해충 방지효과 '글썩'

어느새 겨울이 지나고 봄의 전령사라 불리는 매화 등 꽃이 피어나는 계절이 성큼 다가왔다.

농촌에서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영농기를 준비하는 손길이 바빠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밭두렁이나 비닐,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으로 부득이한 경우 시·군의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마을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산림보호법 제53조에 의거해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받을 수 있다.

아직까지 많은 농민들이 영농기를 준비하면서 해충을 모두 불태워 없애기 위한 논·밭두렁 태우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논둑에 서식하는 미세동물은 딱정벌레, 노린재 등 해충이 908마리(11%) 서식하는 반면, 거미, 톱목 등 해충의 천적이 7천256마리(89%)가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해충을 태우려는 소각 행위가 오히려 해충의 천적을 사라지게 만들어 해충 방지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봄철은 겨우내 쌓여있던 마른 낙엽과 건조한 바람 등으로 작은 불씨도 산불로 번지기 쉽고,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김태문 보성소방서 119구조대

독자기고

3월, 나들이 갈때 안전까지 챙기자

3월은 지역별로 각종 축제가 여기저기서 열리고 따뜻해진 날씨로 산행과 가족과 함께 집을 비우는 일이 많은 것이며 그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크므로 이런 시기일수록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유형을 파악해 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겠다. 첫째, 화재관련 안전사고이다.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집을 나갈 때는 가스레인지 등 화기위험요소가 안전한지 살피고 꺼진 불도 다시 본다는 심정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논·밭두렁 기타 농산폐기물을 소각해서는 안 되지만 필히 소각해야 할 때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소화 장비 등을 비치해 두는 등 안전조치 후 소각해야 한다.

둘째, 축제장 안전사고와 음주관련 사

고다. 축제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야외 나들이를 위한 장시간 운전으로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므로 질서의식과 여유 있는 운전이 필요한 때이다.

또한 기분에 취해 술을 마시는 것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산행시 안전사고이다. 자신의 체력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탈진, 실족으로 인한 추락사고, 지정된 등산로를 이탈해 길을 잃은 사고, 산악안전수칙 미 준수 등 사고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해빙기 낙석사고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선근 보성소방서보성119안전센터소방위

전남도민일보 www.jndomin.kr 6124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소석빌딩 5층

회장 김경 대표전화 (062)227-0000 FAX (062)227-0084  
 발행인 전광선 광고 (062)227-0083 구독료 월 10,000원  
 사장·편집인 이문수 등록번호 광주, 가25(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편집국장 제갈대중 서울사무소 서울시구로구 구로동 191-7에이스테크노8차 140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남도민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면은 온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마음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2580@jndomin.kr 전화 (062) 227-0000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읽는 바른신문

전남도민일보 지역기자안내

지역	직급	성명	연락처	지역	직급	성명	연락처
광안구청	국장대우	고훈석	010-9992-8212	강진	차장	전운재	010-6221-3346
광안	차장	고도경	010-3699-3804	해남	본부장	윤규진	010-2001-8078
동구	국장대우	서기만	010-4602-0708	장성	부장	정운섭	010-3640-6323
남구	기자	이유빈	010-9632-5879	무안	차장	김수형	010-3648-0281
북구	부장	김정관	010-9464-2555	영광	차장	김진	010-9221-0000
목포	국장대우	박성태	010-3602-5869	여수	본부장	오승택	010-2080-6002
신안	국장대우	박성태	010-3602-5869	순천	본부장	오승택	010-2080-6002
나주	국장대우	김동철	010-3604-2611	광양	본부장	오승택	010-2080-6002
담양	국장대우	강종연	010-6297-7599	고흥	본부장	윤규진	010-2001-8078
곡성	부국장대우	심섭식	010-3608-2634	함평	차장	박정호	010-5189-5639
구례	국장대우	심건식	010-4624-0005	영암	국장대우	김희선	010-3631-1617
보성	국장대우	김용욱	010-3602-8103	완도	국장대우	유대성	010-5007-5983
화순	차장	남호경	010-3624-6785	진도	부장	한길준	010-8265-8848
장흥	국장대우	김정근	010-3601-3517				